

韓國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計量分析*

丁 聲 鎮**

논문초록 | 오늘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흔히 주장되듯이, 1997년 外換金融危機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해 온 社會的 蓄積構造가 1980년대 말 이후 붕괴하면서 시작된 利潤率의 저하에 기인한 장기불황의 심화 국면이다. 기존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는 구소련 동유럽 체제의 몰락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 1987년 6월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의 해체 등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는 新自由主義로의 결정적 선회를 통해 붕괴한 社會的 蓄積構造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구조적 위기의 폭발, 즉 1997년 外換金融危機를 재촉했다.

핵심주제어: 社會的 蓄積構造, 利潤率, 長期波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P1

I. 서론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1997년 外換金融危機를 계기로 하여 현재화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적 위기는, 흔히 주장되듯이, 1997년 外換金融危機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87년의 6월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하나의 계기로 된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를 그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는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익명의 심사위원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및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997년 外換金融危機가 폭발하기 훨씬 전인 1980년대 말부터 구조적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 글에서 나는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붕괴’라는 관점 및 ‘장기호황의 장기불황으로의 반전’이라는 시각에서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대한 계량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社會的 蓄積構造(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라는 개념은 그 창안자인 Gordon(1982, p. 23)에 따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개별 자본가의 선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환경” 혹은 자본축적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정의되며, 이 환경이 안정적이고 우호적일 때 자본가는 생산적 투자를 늘리고 그 결과 호황이 도래한다.¹⁾ 즉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환경이 社會的 蓄積構造이며, 이 社會的 蓄積構造가 순조롭게 기능할 동안은 호황이 지속되고 社會的 蓄積構造가 붕괴하면 불황이 발생한다.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붕괴에 대응하는 경기순환은 10년 주기의 통상적인 주기적 산업순환이 아니라 1950~60년 주기의 이른바 ‘콘드라티에프 순환’으로 알려진 長期波動이다. 즉 社會的 蓄積構造가 전실하게 구축되어야 장기호황이 시동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社會的 蓄積構造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장기불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長期波動 및 社會的 蓄積構造 개념이 19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 역사를 서술하는 개념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 개념을 특정 학파의 이론 구조 및 정치와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²⁾ 무엇보다 長期波動 및 社會的 蓄積構造의 개념은 자본주의 붕괴론 아니면 승리론으로 귀결되고 말았던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 및 그것이 기반했던 ‘독점과 종속의 문제설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³⁾

1) 社會的 蓄積構造라는 개념은 Gordon(1978)이 처음 제안했으며 Bowles et al. (1989, 1990) 및 Gordon(1991)에서 체계화되었다. 社會的 蓄積構造 학파의 최근 성과는 Kotz et al. (1994)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소개하고 평가한 것으로는 정운영(1995) 등이 있다.

2) 나는 社會的 蓄積構造 학파처럼 맑스의 노동가치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들과 같은 개량주의 정치에 동의함이 없어도 社會的 蓄積構造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이 개념을 콘드라티에프의 장기순환 이론이 아니라 Mandel(1980)의 맑스주의적인 비대칭적 長期波動 이론과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의 개량주의적 성격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으로는 Devine(1985)을 참조할 수 있으며, 맑스주의적 長期波動 이론의 최근의 전개에 대해서는 Mandel(1992), Shaikh(199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과 長期波動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 및 관계에 대해서는 Gordon et al. (1982, pp. 18~47), Gordon(1991) 및 Kotz(1994)를 참조할 수 있다.

3)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진보진영이 널리 수용하고 있는 조절이론은 이른바 ‘주변부 포드주의’

나는 먼저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30년 호황'이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 장기호황을 가능하게 한 社會的 蓄積構造를 소묘할 것이다. 그리고 1987년 이후 이 社會的 蓄積構造가 붕괴하면서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으로 돌입하는 과정을 계량분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89~92년의 불황⁴⁾이 단순히 순환성 불황이 아니라 장기불황 즉 구조적 위기의 초입국면의 불황이며, 1993~95년의 호황은 지난 30년 장기호황의 연속이 아니라 이미 개시된 구조적 위기, 장기불황 속에서의 순환적 반전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1980년대 말 이후 노태우-김영삼 정부가 시행했고, 오늘 김대중 정부가 더욱 충실하게 답습하고 있는 新自由主義 정책은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를 수립하기는커녕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폭발과 오늘 경제위기의 심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II.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특징

社會的 蓄積構造 학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약 20년에 걸친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가능하게 했던 社會的 蓄積構造는 다음 네 수준에서 확립된 제도적 권력구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60년대 말 이 권력구조가 붕괴하면서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표 1>에 제시된 모델로 도식화할 수 있다.

첫째, 파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의 자본이 외국의 구매자 및 판매자들과 거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으며 국제적인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었다. 둘째,

에서 '본래적 포드주의'(또는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의 전망 분석에 일면적으로 치중하여,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상호간의 모순, 및 그에 기초한 한국자본주의의 長期波動的 문제를 분석하지 못했다.

- 4) 통계청에 따르면 1989~92년중 1989년 7월(제 5 순환의 저점)에서 1991년 1월(제 5 순환의 정점)에 이르는 확장 국면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1989, 92년 불황'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제 5 순환의 확장 지속기간(18개월)은 1970년대 이후 가장 짧았으며 확장의 규모도 그리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989~92년 불황'이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편 제 6 순환의 저점과 정점은 각각 1993년 1월과 1995년 4/4분기이므로 '1993~95년 호황'이라는 표현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기준순환일과 부합된다.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역사에 대해서는 백웅기(1993) 참조.

〈표 1〉 미국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붕괴 모델

권력 관계	1948~68년	1968년~현재
국제정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
자본 대 노동	자본-노동간 협약	자본-노동간 대결
자본 대 시민	자본-시민간 협약	자본-시민간 대결
국제경제	국제적 경쟁의 제한	국제적 경쟁의 격화

자료: Bowles et al. (1990), pp. 47~79.

자본-노동간의 협약(capital-labor accord)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및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자의 통제력을 보장해 주었다. 셋째, 자본-시민간의 협약(capital-citizen accord)은 시민들에게 약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대신에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해 주었다. 넷째, 전후 일본 및 주요 유럽경제의 파파에 기인한 국제적 경쟁의 봉쇄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경쟁을 제한했다.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은 제2차 대전 후 1960년대 말까지 미국 기업이 위와 같은 제도화된 권력관계에 힘입어 잠재적 도전자들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은 또 1960년대 말 이후 이러한 제도적 권력관계들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현재화한다고 주장한다.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은 원래 미국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그 창안자들도 이 이론의 특정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Gordon et al., 1987, p. 57). 하지만 나는 경제의 장기성과를 제도적 권력구조의 성립과 붕괴라는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의 기본 가설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 동학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⁵⁾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을 한국경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 원래 미국 경제의 장기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에는 한국과 같은 발전주의 국가의 산업화의 설명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와 자본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 국가-자본간의 권력관계는 미국의 경우 결정적인 제도적 권력관계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5) Kotz et al. (1994)에는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을 푸에르토리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일본에 적용한 사례연구들이 수록되어 있다.

〈표 2〉 한국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붕괴 모델

권력 관계	1961~87년	1987년~현재
국제정치	미국의 반공요새	탈냉전
자본 대 노동	병영적 노사관계	대립적 노사관계
국가 대 자본	국가의 자본 규율 육성	재벌의 자율성 증대
국가 대 시민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민주화
국제경제	한-미-일 삼각무역	무역수지 적자의 구조화

한국경제의 社會的 蓄積構造 분석에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한국에서 국가는 1960년대 이래 경제계획, 공기업 창설, 은행국유화, 및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동태적 변동의 많은 부분이 국가와 자본 간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조차 거부한 억압적인 권위주의적 군부독재로 점철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초억압적 국가 기구 때문에 자본과 시민 간의 권력관계가 미국처럼 독자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국가와 시민 간의 권력관계로 흡수되어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에서 시민의 직접적 대립물은 자본이라기보다 국가였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경제와 같은 자본-시민간 권력관계를 국가-시민간 권력관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정을 감안하여 한국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골격과 붕괴과정을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30년 호황을 지탱해 주었던 社會的 蓄積構造 모델은 대체로 1960년대 초에 그 골격이 완성되어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는 다섯 가지 수준의 권력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기에 미국은 군대주둔, 경제원조, 및 한국의 대미수출을 묵인하는 것을 통해 한국의 부르주아 정권을 지지해 왔다. 미국정부는 한국의 안정된 반공체제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정권도 지지했다. 한국의 반동적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경제적 지지는 상당 기간 억압된 정치적 안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것은 한국자본의 성장에 기여했다. 물론 미국은 이미 1945년 분단 이후 줄곧 한국에 대해 결정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1961년 쿠데타

이후 박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원조의 감소를 그 한 배경으로 했고, 또 미국정부의 권고에 거슬러 강행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반공요새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함이 없이는 19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할 수 없다.⁶⁾

둘째, 한국의 자본-노동간의 권력관계는 미국처럼 자본-노동간의 협약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노동의 일방적 종속관계로 특징지워진다. 억압적 종속적 노사관계의 기초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노동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운동이 괴멸당한 데서 주어졌다. 그리고 억압적 노사관계는 1960년 4월 혁명과정에서 분출한 노동운동을 금압한 196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거의 병영화되었다. 박정권이 애용한 각종의 초헌법적 긴급조치는 서구수준의 노동법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었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극도로 억압되었다. 1979년 박정희 피살 후 노동운동은 다시 한번 분출했지만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 이후 다시 폭력적으로 억압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노동조합 조직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재편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와 같은 억압하에서 노동자들은 가혹한 착취를 당했다. <표 3>에서 보듯이, 1970~80년대 제조업부문의 착취율은 대체로 400%를 상회했는데, 이는 미국, 인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시기 한국은 장시간노동과 높은 산업재해율로 세계적인 악명을 떨쳤다. 한국경제 기적의 비밀은 바로 병영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고율의 착취에 있다.

셋째, 1960년대 이후 한국의 社會的 蓄積構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의 자본에 대한 지원과 통제에서 찾을 수 있다. 박정희는 집권후 은행을 국유화하고 광범위한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국가주도적 공업화를 추진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하에서 정부관료와 재벌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에 분개하고 당시 북한과 일부 제3세계 國家資本主義 체제에서 이루어진 인상적인 경제성장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반공과 자립경제 건설을 국시로 내걸었다. 이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미국원조에 의존한 자유시장지향 경제와의 결별을 의미했다.⁷⁾ 박정권은 주로 정책금융을 무기로 한 산업정책을 통해 재벌을 통제하고 육성

6) 이 점에서 Cumings(1984)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7) 이에 대해서는 박동철(1993) 참조.

〈표 3〉 社會的 蓄積構造의 계량분석: 제조업 부문 (1971~98년)

(단위: %)

연 도	(1) 장비율	(2) 투자효율	(3) 투자효율	(4) 생산성	(5) 착취율	(6) 利潤率	(7) 利潤率	(8) 축적률	(9) 성장률
1971	8	21.5	91	17.9	479	1.20	1.00	29.1	18.5
1972	7	24.4	117	16.6	497	3.90	3.80	-22.8	14.3
1973	9	28.1	134	42.0	502	7.50	7.90	85.8	29.3
1974	10	25.7	131	9.5	457	4.80	5.70	12.3	16.6
1975	11	25.0	130	15.0	492	3.40	3.90	31.9	12.9
1976	13	26.5	144	25.1	452	3.90	4.60	35.3	23.1
1977	15	28.1	140	14.0	425	3.50	4.50	41.6	14.4
1978	15	30.8	181	27.8	403	4.00	5.00	34.9	20.8
1979	21	31.2	164	27.2	330	2.70	3.40	8.5	9.5
1980	29	26.3	140	19.3	373	-0.20	-0.20	-28.6	-0.9
1981	38	25.8	136	28.2	413	0.01	0.02	-7.6	9.5
1982	44	25.0	131	12.2	406	0.87	1.03	3.8	5.7
1983	47	26.0	139	13.4	424	2.68	3.27	3.2	14.4
1984	45	26.0	159	9.5	424	2.72	3.41	35.8	16.3
1985	46	25.6	172	9.3	414	2.47	2.97	19.2	6.0
1986	46	26.7	193	13.4	431	3.63	4.47	24.1	18.7
1987	59	27.7	181	17.7	410	3.58	4.44	39.5	18.3
1988	69	29.8	187	21.1	384	4.05	4.92	13.9	12.1
1989	86	27.9	183	19.4	354	2.50	2.72	13.3	3.5
1990	100	27.1	175	18.8	408	2.32	2.42	16.3	9.2
1991	116	25.8	182	15.2	437	1.75	1.75	5.7	9.5
1992	140	24.4	171	12.6	446	1.48	1.40	-11.6	5.3
1993	169	24.4	157	14.0	448	1.70	1.59	-4.4	5.4
1994	181	25.4	175	18.1	466	2.74	2.64	30.9	10.8
1995	199	26.4	195	19.2	497	3.60	3.59	21.2	11.3
1996	220	23.0	177	1.1	496	0.99	0.93	13.8	6.8
1997	276	19.6	151	4.7	542	-0.34	-0.30	1.0	6.6
1998	380	17.6	123	11.7	650	-1.84	-1.52	-45.7	-7.4

정의: (1) 기계장비율 (= 기계장치/종업원수)의 지수(1990=100)

(2) 총자본투자효율 = (부가가치/총자본) × 100

(3) 기계투자효율 = (부가가치/기계장치) × 100

(4)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종업원수)의 성장률

(5) 잉여가치율 = { (부가가치 - 생산직 노동자 임금) / 생산직 노동자 임금 } × 100

(6) 매출액경상이익률 = (경상이익/매출액) × 100

(7) 총자본경상이익률 = (경상이익/총자본) × 100

(8)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률(1995년 불변가격)

(9) 제조업생산의 성장률(1995년 불변가격)

자료: (1) ~ (4), (6) ~ (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5):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8) ~ (9):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했다. 박정권은 수출할당량과 같은 특정한 성과기준을 달성하고 뇌물 공여와 같은 충성서약을 한 재벌에 대해서 특혜금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은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다. 박정권은 엄격한 자본통제를 실시했다. 1960~70년대 주요 투자재원이었던 외국차관은 정부의 승인 없이는 도입할 수 없었다. 또 정부는 과당경쟁과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벌의 투자계획도 조정했다. 1917년 이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자본주의는 국가의 자식인 것처럼 보인다”(Trotsky, 1989, p. 37).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이와 같은 강력한 國家資本主義的 社會的 蓄積構造⁸⁾ 없이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기적’이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World Bank (1993)를 비롯한 新自由主義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Amsden (1989)의 말대로, 한국의 ‘기적’은 오히려 강력한 국가에 의한 “가격 왜곡”(getting prices wrong)에 기인한 것이다.⁹⁾

넷째, 장기호황기 社會的 蓄積構造의 또 하나의 버팀목은 군부독재에 의한 시민의 민주적 제권리의 억압이다. 권위주의적 군부독재는 무엇보다 병영적 노사관계와 국가의 자본에 대한 지원과 통제 메커니즘의 작동을 위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축적에 기여했다.

다섯째, 1960~80년대 수출지향적 개방경제는 이른바 “성장의 트라이앵글 구조”(이대근, 1995, p. 22)라고도 불리는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에 기초하고 있었다. 1960~80년대 한국경제가 다른 제3세계 경제들과 구별되는 점은 단지 그것이 수출지향적 경제라는 사실이라기보다 미국, 일본과의 국제정치경제관계와 특수한 방식으로 접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박정권은 1960년대 초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

8)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심 성장과 능동적 국가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기업과 정부가 모두 기업가적이었으며, 양자가 모두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경영자들의 위계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기업체제를 국가기업가적 자본주의(state entrepreneurial capitalism)라고 부른다”(Amsden, 1995, p. 6).

9) 하지만 Amsden의 주장은 이 글과 같은 社會的 蓄積構造 분석과 비교하면 불충분하며 일면적이다. 우선 그녀는 한국경제의 社會的 蓄積構造를 형성하는 권력관계 중 단지 하나에만 즉 국가-자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수준의 권력관계들의 분석은 빠뜨리거나 무시한다. Amsden의 주장에서 행위자는 정부와 재벌뿐이며 노동자와 세계시장은 어떤 의미있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자본의 경제적 성공의 결정적 특수성은 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율 정도의 차별성이 아니라, Cumings (1984)가 지적한 동북아시아의 특정한 역사적 지정학적 맥락(한-미-일 안보체제)과 세계사상 유례없는 고율의 착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Amsden (1989)에 대한 비판으로는 Hart-Landsberg (1990)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실패한 후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와 미국 요구에 따른 월남파병을 강행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미-일 삼각무역 구조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미-일 삼각무역 구조는 장기호황기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의 불가결한 고리의 하나였다. 그런데 한-미-일 삼각무역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자본재와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의 수출을 받아준다는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상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표 4>에서 보듯이 198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지켜졌다.

<표 4> 한국의 무역수지 (1981~98년)

(단위: 10억 달러)

연 도	전 체			대미국			대일본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1981	21.3	26.1	-4.9	5.7	6.0	-0.4	3.5	6.4	-2.9
1982	21.9	24.3	-2.4	6.2	6.0	0.3	3.4	5.3	-1.9
1983	24.5	26.2	-1.7	8.3	6.3	2.0	3.4	6.2	-2.8
1984	29.2	30.6	-1.4	10.5	6.9	3.6	4.6	7.6	-3.0
1985	30.3	31.1	-0.9	10.8	6.5	4.3	4.5	7.6	-3.0
1986	34.7	31.6	3.1	13.9	6.5	7.3	5.4	10.9	-5.4
1987	47.3	41.0	6.3	18.3	8.8	9.6	8.4	13.7	-5.2
1988	60.7	51.8	8.9	21.4	12.8	8.7	12.0	15.9	-3.9
1989	62.4	61.5	0.9	20.6	15.9	4.7	13.5	17.4	-4.0
1990	65.0	69.8	-4.4	19.4	16.9	2.4	12.6	18.6	-5.9
1991	71.9	81.5	-9.7	18.6	18.9	-0.3	12.4	21.1	-8.8
1992	76.6	81.8	-5.2	18.1	18.3	-0.2	11.6	19.5	-7.9
1993	82.2	83.8	-1.6	18.1	17.9	0.2	11.6	20.0	-8.5
1994	96.0	102.3	-6.3	20.6	21.6	-1.0	13.5	25.4	-9.9
1995	125.1	135.1	-10.1	24.1	30.4	-6.3	17.1	32.6	-15.6
1996	129.7	150.3	-20.6	21.7	33.3	-11.6	15.8	31.4	-15.7
1997	136.1	144.6	-8.5	21.6	30.1	-8.5	14.8	27.9	-13.1
1998	132.3	93.3	39.0	22.8	20.4	2.4	12.2	16.8	-4.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Ⅲ.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

한국자본주의의 社會的 蓄積構造는 1980년대 말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 社會的 蓄積構造가 이 시기부터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은 위에서 소묘한 다섯 가지 제도적 권력관계의 수준에서 모두 발견된다.

첫째, 1989년 이후 소련 동유럽 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른바 ‘탈냉전’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국제적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물론 북한체제가 아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시아 반공요새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소 냉전시대에 비하여 그것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을 지배한 반공이데올로기는 물론 여전히 지배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종전에 비해 그 효력이 감소했다. 냉전 대신 국민국가들간의 경제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에 무역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은 더이상 ‘관대한 무시’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둘째, 1987년 6월항쟁에 잇따른 노동자 대투쟁은 고율의 착취체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다. 1987년 7, 8, 9월 사이에 3,000건 이상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100만 명 이상의 전국 노동자들이 이에 참가했다. 7, 8, 9월의 대중파업은 그때까지의 社會的 蓄積構造를 뿌리째 뒤흔든 지배체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었다. 민주노조의 폭발적 확산과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역량의 증대는 실질 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결과시켰으며,¹⁰⁾ 기존의 병영적 노사관계를 대립적 노사관계로 변모시켰다. 그 결과 착취율은 <표 3>에서 보듯이 1986년 431%에서 1989년 354%로 크게 저하했다.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30년 호황의 물질적 기초였던 병영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고율의 착취체제를 더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노동자계급의 분노가 집단적으로 표출한 사건이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의 성장은 30년 호황의 지속에 따른 산업예비군의 고갈(실업률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실직비용’(cost of job loss)의 저하를 그 하나의 객관적 배경으로 한다.¹¹⁾

10) 제조업부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986년 54.7시간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198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 52.6시간, 1990년 49.8시간, 1995년 49.2시간으로 저하했다(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p. 178).

11) 실업률은 1980년 5.2%에서 1985년 4%, 1986년 3.8%, 1987년 3.1%로 지속적으로 저하했

셋째, 국가주도적 축적과정에서 재벌이 비대화되었다. 예컨대 1987년 30대 재벌은 제조업부문 유형고정자산의 34.4%를 소유하고 부가가치의 36.5%를 생산하고 있었다(정병휴·양영식, 1992, pp. 43, 40). 비대한 재벌은 과거처럼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게 되었으며, 1980년대 은행의 민영화 이후 정책금융의 위력이 감소하면서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도 줄어들었다. 재벌은 각종 명목의 '준조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던 보호와 규제 조치도 거추장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미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이 주장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말 이후 '규제완화'는 재벌의 제 1의 슬로건으로 된다. 그리하여 Amsden(1989)이 한국경제의 예외적 성공의 비밀이라고 강조한 '국가의 자본에 대한 통제와 지원의 메커니즘'이 자본의 성장 결과 도리어 진부화되는 역설이 초래되었다.

넷째, 1987년 6월항쟁은 이른바 민주화과정을 진전시킴으로써 국가-시민간의 권력관계를 크게 교정했다. 물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이 아직 엄존하고 있지만, 시민의 민주적 제권리는 특히 1987년 말 대통령 직선,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1995년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이전에 비해 신장되었다.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제권리를 유린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 힘들게 되었다. 환경운동과 같은 각종 신사회운동과 자율적인 '시민사회' 영역이 출현 확대되면서, 기존의 초억압적 국가-시민관계는 상당히 이완되었다. 그런데 1987년 6월항쟁의 주관적 객관적 조건은 권위주의적 군부독재하에서 이루어진 고도성장 과정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6월항쟁은 '발전하는 경제와는 대조적인 전근대적 정치'라는 그 당시의 화두와 함께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부정합이 '사회혁명'의 도래를 준비한다는 역사유물론의 기본정식의 타당성을 일상적 실천에서 입증했다.

다섯째,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트라이앵글 구조"였던 한-미-일 삼각무역 구조가 미국경제의 쇠퇴에 따른 보호주의 공세, 중국, 아세안 제국 등 후발 수출주도 경제의 추격,¹²⁾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연 등의 요인들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이후

는데(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각년호), 이로부터 1980년대 장기호황의 말기 국면에서 실적비용이 저하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가들은 장기호황의 말기 국면에서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하면 산업예비군이 고갈되어 실적비용이 저하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와 노동강도의 저하 및 노동생산성 상승의 둔화를 초래하여 수익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장기호황이 종식된다고 주장한다. 실적비용의 엄밀한 추정방식에 대해서는 Bowles et al. (1989) 참조.

사실상 해체되었다. 수출주도 경제와 같은 외연적 경제성장 모델은 내포적 경제성장 모델과 달리, 모델의 복제가 모델의 파산을 초래한다는 자기모순을 갖는다. 게다가 그간의 중화학공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일본에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 4>에서 보듯이, 가장 큰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대미수지가 적자기조로 반전되었다. 그에 따라 대미수지 흑자로 대일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고도성장기 국제수지구조가 근본적으로 와해되었다.

자본재와 기술에 대한 수입의존의 지속은 한국경제의 구조고도화에 대해 여전히 중대한 걸림돌이다.¹³⁾ 차입한 기술의 학습을 통해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대시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 방식은 세계체제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의 상승 전략으로는 유효했을지라도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진입 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기술혁신이 아닌 기술차입, 생산성 향상이 아닌 생산요소의 투입에 기초한 성장방식은 정의상 한계를 갖고 있다(Amsden and Hikino, 1993, p. 259).

1980년대 말 國家資本主義的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아니라 기존의 社會的 蓄積構造 그 자체의 모순의 심화로부터 비롯되었다.¹⁴⁾ 병영적 노사관계와 국가의 자본 규율 및 육성, 반민주적 정치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社會的 蓄積構造는 1960년대 이후 약 30년 동안 기술 차입과 생산요소 투입의 증대에 기초한 고도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이 되면서 그 결과 이루어진 생산력 발전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발전이 기존의 社

12) Hart-Landsberg(1998)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 수출부진의 원인을 수출주도 공업화 모델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동종제품의 세계적 과잉생산에서 찾는다. “위기의 근원은 아시아의 성장전략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 이들 나라의 무역 문제는 점점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같은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려 했기 때문에 더 격화되었다. ... 요컨대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자본 통제가 있든 없든, 더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다줄 수 없게 되었다.”

13) 이와 관련하여 Kim(1993)은 한국경제의 기술능력 향상의 한계를 부품공급산업의 취약성에서 찾는다. “한국경제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결정적인 관련 부품산업의 부재이다. 재벌은 수입한 부품과 기계에 의존한 최종 제품생산에 집중했다. ... 하지만 국내 부품산업으로부터 연속적이고 유연한 부품 공급의 뒷받침 없이는 한국기업은 제품과 공정혁신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Kim, 1993, p. 382).

14) “1961~87년 한국에서 집행된 정책의 성공 그 자체가 그 정책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1980년대 들어 한국의 고속성장이 기초했던 구조적 환경적 조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Johnson, 1994, p. 10).

社會的 蓄積構造와 충돌하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양대계급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성장하고 이들간의 대립, 투쟁이 격화되었으며, 자본과 국가 간의 갈등도 증대했다. 기술 차입과 생산요소 투입에 기초한 생산력 발전 단계에서는 순기능적으로 작용했던 구래의 社會的 蓄積構造가 이제는 생산력의 발전(장기호황의 지속 및 기술혁신과 생산성의 향상에 기초한 생산력 발전구조의 고도화)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전화했다. 1987년 6월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이와 같은 國家資本主義的인 社會的 蓄積構造와 생산력 발전 간의 모순의 폭발인 동시에, 기존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해체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계기였다.

1987년은 예컨대 김형기(1996)가 주장하듯이, 한국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확립,” 또는 “예속적 포드주의의 본래적 의미의 포드주의로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진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고도화의 “전환점”이 아니라, ‘30년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社會的 蓄積構造가 붕괴하면서 장기불황으로의 반전이 시작된 해이다. 정치경제학의 과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일면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성, 즉 주기적 공황과 장기변동으로 점철된 축적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적대 따라서 그 궁극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IV. 한국자본주의의 長期波動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1989~92년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그런데 곧이어 1993~95년 호황이 비교적 큰 규모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1989~92년 불황은 통상적인 순환적 침체 국면의 하나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1989~92년 불황은 30년 장기호황이 장기불황으로 반전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불황이며, 1993~95년 호황은 이미 개시된 장기불황 속에서의 순환적 반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0년을 전후하여 노태우 정권이 남발했던 ‘총체적 위기’, ‘총체적 난국’ 같은 표현은 노동자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1987년 이후 현재화되는 구조적 위기를 지배계급이 본능적으로 감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돌입했음은 다음 몇 가지 수량적 지표들로부터도 확인될 수 있다.¹⁵⁾

〈표 5〉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

(단위: %)

기 간	경제 전체	제조업
1962~70	8.7	18.4
1970~73	8.7	20.5
1973~78	9.8	20.0
1978~83	6.5	10.5
1983~87	10.0	15.5
1987~90	9.7	11.8
1990~95	7.6	7.9

주: 1) 1990년 불변가격 GDP의 연평균성장률임.

2) 각 기간의 시점과 종점은 기준순환일의 정점에 해당되는 연도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첫째, 〈표 5〉에서 보듯이 생산의 장기적 성장 추세가 1987년 이후 둔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기순환의 정점을 연결한 각 순환주기의 연평균성장률이 1983~87년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 순환주기에서 점차 둔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장기호황에서 장기불황으로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장기호황의 정점이 1987년경에 위치한다고 잠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1990년대 연평균 GDP 성장률은 물론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비하면 현저하게 둔화된 것이다. GDP 성장률의 둔화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1990~95년 연평균성장률 7.9%는 1960~80년대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생산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에 따라, 〈표 5〉에서 보듯이, 경제 전체의 GDP 성장률과 제조업 생산의 성장률 간의 격차가 갑자기 소멸했는데, 이는 지난 30년 장기호황의 견인차였던 제조업 생산의 역동성이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표 3〉에서 보듯이 1989년 이후 제조업부문의 효율성 지표들(총자본투자효

- 15) 사회적 축적구조의 붕괴가 장기불황을 초래했다는 명제를 완전하게 계량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Bowels et al. (1986, 1989) 처럼, 사회적 축적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계량가능한 양적 지표로 전환하여 독립변수들로 설정하고, 이들을 생산성, 축적률, 이윤율 등의 종속변수에 대해 각각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축적구조의 붕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생산성, 축적률, 및 이윤율의 추이 분석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그쳤다. 한국의 사회적 축적구조에 대한 완전한 계량분석은 필자의 추후 연구과제이다.

율, 기계투자효율,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효율성 지표들은 1993~95년 호황기에 다시 호전되었지만, 1996년 불황과 함께 다시 악화되었다. Krugman(1994) 등은 요소투입의 증가에 기초한 한국경제의 성장효율이 1990년대 이후 저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과 노동의 급속한 축적이 동아시아 성장의 기적을 상당 부분 설명”(Young, 1994, p. 973) 하며, “아시아의 성장은 고도성장기 소련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효율의 향상보다는 노동과 자본 같은 투입재의 예외적 성장에 추동”(Krugman, 1994, p. 70)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성장은 조만간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투입단위당 산출의 성장이 아니라 투입의 증대에 기초한 경제성장은 불가피하게 수확체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Krugman, 1994, p. 63).

셋째, <표 3>에서 보듯이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는 다른 무엇보다 1989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 지표(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의 저하를 결과시켰다.¹⁶⁾ 수익성 지표는 1993~95년 호황기에 다시 호전되었지만, 이전의 정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1996년 불황과 함께 다시 저하했다.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의 추이는 맟스의 利潤率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입증하는 듯하다. 1990~92년 수익성의 저하는 착취율의 저하가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실제로 착취율은 <표 3>에서 보듯이 1987~89년 저하한 후 1989~98년 사이에 354%에서 65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배후에 임금상승-이윤압박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표 3>은 1990년대 이후 기계장비율은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자본의 효율성은 정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수익성의 감소의 원인이 과다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있다는 사실은 장하원(1997)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장하원(1997)에 따르면, 1980년대

16)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붕괴가 이윤율의 장기적 상승과 저하로 표출된다는 것은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의 핵심적 명제이다. “社會的 蓄積構造의 관점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제도적 요인들의 정합된 모델을 정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어진 제도적 환경에서 이윤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 만약 社會的 蓄積構造의 관점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속가능한 제도적 구조의 확립과 함께 시작된 호황기는 상승하는 수익성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가 초래한 공황기는 저하하는 수익성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Bowles et al., 1986, p. 134).

후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역수의 대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산출/자본 계수'의 하락 폭이 착취율의 역수의 대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윤분배율'의 하락 폭보다 컸다. 즉 1986~90년 利潤率의 평균 -13.0% 포인트 하락 중 이윤분배율은 -5.8% 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산출/자본 계수'는 -7.7% 포인트 하락했다(장하원, 1997, pp. 230, 244).

利潤率의 저하에 따라 <표 3>에서 보듯이 축적률(총자본형성의 성장률)도 1987년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둔화되었다(1987년 39.2%, 1990년 16.3%, 1993년 -4.4%). 물론 축적률 역시 1994~95년 호황과 함께 잠시 호전되었지만 198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1996년 이후 다시 급격히 둔화되었다.

1993~95년 경기가 다시 과열되었지만, 이는 1995년 말 곧 종식되었으며, 1996년 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다시 운위되었다. 1993~95년의 순환적 호황은 부분적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정책하에서 이루어진 착취율의 상승을 배경으로 하지만, 주로 '엔고'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급증에 기인한 것이었다. 1993~95년 호황의 '거품'적 성격 혹은 취약성은 <표 4>에서 보듯이, 이 시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 특히 대미무역적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1996년 이후 대미무역적자의 증가는 1995년 미-일간의 새로운 환율(금리)협조 조정(이른바 '역 Plaza 합의')에 따라 '엔고'가 '엔저'로 전환한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¹⁷⁾ 이 점에서 1993~95년의 호황은 최초의 국제수지 흑자와 외채 감소를 가능하게 했던 1986~88년 '3저호황'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1993~95년 호황은 오히려 진부화된 社會的 蓄積構造와 축적체제가 거듭나야 할 절박성을 지배계급이 잠시 잊게 함으로써 이후 불황을 더 심화시키고 결국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폭발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社會的 蓄積構造는 누적되는 모순과 수차 엄습한 정치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1980년대 말까지는 순조롭게 작동하여 30년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1986~88년 '3저호황'은 30년 호황의 절정이자 그 최종 국면이다. 1960년대 초에 시작하여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한국의 장기호황은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황금시대'가 종식된 1968~73년 이후에도, 다시 말하여 선진자본주의 제국이 구조

17) "엔화에 대한 달러 가치의 상승은 ...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수출 전망을 자동적으로 개선한 반면, 엔화에 대한 동아시아 통화가치의 상승은 매우 수출의존적인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전망을 쉽사리 악화시켰다"(Brenner, 1998, p. 226).

적 위기로 돌입한 후에도 무려 약 20년 이상 더 계속되었다. 또 한국에서 장기불황은 선진자본주의 제국에서 1968~73년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이 약 20여 년을 경과한 후(따라서 콘드라티에프에 따르면 새로운 장기호황으로 반전될 조짐이 보여야 할 시점)인 1990년대 들어 현재화되었으며, 1997년 外換金融危機는 그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長期波動의 특수성 특히 그 국제적 비동시성의 문제는 향후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1987년을 획기로 한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와 함께 장기호황이 장기불황으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이다.¹⁸⁾

V. 新自由主義: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의 출현?

논리적으로는, 한국자본주의가 만약 1980년대 말 붕괴한 社會的 蓄積構造를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로 대체하는 데 성공한다면, 1997년 폭발한 外換金融危機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고도성장을 재개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현재의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가 수립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구축된 社會的 蓄積構造가 21세기라는 조건에서 장기호황을 시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분명한 사실은 구래의 國家資本主義的인 社會的 蓄積構造가 진부화되고 붕괴하면서 구조적 위기와 장기불황이 현재화했으며, 1997년 外換金融危機는 그 대단원이라는 점이다.

구래의 국가주도적 발전전략이 진부화했으며 기존의 社會的 蓄積構造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은 김영삼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¹⁹⁾ 그런데 주지하듯이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중단되었으며, 구조변화라는 것도 구래의 국가주도적 발전전략

18) 사회적 축적구조의 성립과 붕괴에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호황과 장기불황이 대응한다는 명제는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을 처음 제안한 Gordon(1978, 1991)이 미국 경제의 사례에서 실증한 바 있으며,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의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다.

19) “지난 30년간은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동원시킬 수 있었던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 (그러나) 과거 개발연대에 우리 경제의 발전원동력이 되었던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운용은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그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특히 정치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자주적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국민들로부터도 더이상 수용될 수 없게 되었다”(대한민국정부, 1993, pp. 9, 14).

의 모습은 그대로 둔 채 新自由主義의 네오-아메리카화 전략으로 단순 이행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가 처음 내걸었던 재정개혁, 금융개혁, 행정 규제개혁, 각종 규제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재벌정책, 금융실명제, 사법개혁, 교육개혁 등 일련의 이른바 개혁조치들조차도 모두 미국의 자유시장경쟁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으로, 한국사회를 新自由主義화, 아메리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은 1980년의 정치경제적 위기 후 민간주도경제로의 이행을 내걸었던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경제정책의 연속 선상에 있었다. '신한국', '신경제정책',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세계화' 따위의 수사와는 관계없이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규제의 완화,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로 귀착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경제정책과 차별화하려고 애썼지만, 이들은 모두 新自由主義의 네오-아메리카화 전략에 입각한 산업구조조정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앵글로-아메리카적 新自由主義 경제정책은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社會的 蓄積構造의 재구성을 촉진하기는커녕, 붕괴하고 있는 社會的 蓄積構造를 붕합 온존시킬 뿐이었으며 경제의 비효율과 모순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미 시작된 장기불황을 더욱 심화시켰고 결국 1997년 外換 金融危機의 폭발을 재촉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그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Amsden(1994)이 주장한 대로 앵글로-아메리카화 경향을 답습 추종한 결과이긴커녕, 그러한 경향에 대한 완강한 투쟁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대만의 성공은 국제시장이 승자를 뽑는 게임 속에서 획득된 것은 아니었다. 또 비교우위가 발전유형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정부가 가격을 조작했으며 경제를 좌지우지했다. 고도성장기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Albert(1993)에 따라 분류한다면, 네오-아메리카형이 아닌, 독일-일본형, 이른바 '라인'(Rhine) 형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현재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수준이 독일-일본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라인형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민주적 노사관계와 복지국가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전의 유형, 또는 '발전의 길'로 본다면 '라인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의 國家資本主義的 경제계획 수립과정에서 미국식 신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²⁰⁾ '라인형' 모델이 오늘 그 효율성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오-아메리카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라인형의 불확실한

미래가 新自由主義의 채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둘째,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IMF-World Bank의 구조조정 계획의 강제가 초래한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잃어버린 10년’, 최근에는 ‘충격요법’과 같은 시장경제의 무매개적 도입이 초래한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제파탄 경험이 입증하듯이, 앵글로-아메리카화 전략은 그것이 발전도상제국에 관철될 경우 경제발전이 아니라, 경제파탄을 결과시켰다. 한국에서도 김영삼 정부 이후 新自由主義的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는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한 투기적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을 조장함으로써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도화선으로 되었다.²¹⁾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특징인 미국사회에서는 적자생존과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네오-아메리카형 新自由主義的 자본주의가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전개될 수 있었지만,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평등주의 심성이 뿌리깊은 사회에서, 게다가 이미 공룡화된 재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네오-아메리카형을 위로부터 강제할 경우 1996년 겨울 노동법의 新自由主義的 改惡이 야기한 총파업과 1998년 민주노총이 新自由主義的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거부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서 보듯이 계급갈등의 폭발적 분출은 필연적일 것이다.²²⁾

셋째, ‘자유시장의 사회적 기반’(social embedness of free market)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新自由主義에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新自由主義가 몽상하는 모든 사회적 규제로부터 해방된 ‘자기조절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은 1930년대 대공황과 파시즘, 전쟁과 같은 대격변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Polanyi(1944)가 간파한 대로이다. 노동력, 토지, 및 화폐와 같은 “의제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지 시장에 의해 조절되는 시장경제체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시장사회

20) 한국 경제학 및 경제정책에서 미국 부르주아 경제학의 영향력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학의 아메리카화는 경이적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70~90년 미국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수는 801명인데, 한국보다 인구가 3배가 되는 일본의 경우 그 숫자는 한국의 1/3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이다 (Amsden, 1994, p. 92).

21)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新自由主義 책임론자들의 주장, 예컨대 Chang et al. (1998), Wade (1998), Wade and Veneroso (1998)를 참조할 수 있다.

22) Cho and Kim (1994, p. 708)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전두환-노태우 정부가 새로운 국가경제관리의 원칙으로 채택했던 자유방임주의 정책은 기존의 한국의 조건들과 제도적으로 들어맞지 않으며, 따라서 마찰과 모순을 초래했다.”

(market society)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자기조절적 시장의 “자기파괴적 작용을 저지하는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인류사회는 절멸되었을 것이다”(Polanyi, 1944, pp. 71, 76). 新自由主義가 꿈꾸는 사회의 완전 시장화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다. 따라서 新自由主義란 정의상 대안적 제도가 될 수 없으며, “의제상품”인 노동력상품까지 다른 상품과 같은 상품으로 다루어 노동시장에 경쟁과 시장의 논리를 완전 관철시켜 착취를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반노동 이데올로기 공세일 뿐이다. 따라서 新自由主義 전략하에서 계급갈등의 조절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가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김영삼 정부의 新自由主義 전략은 국가의 자본에 대한 규율과 지원이라는 이전의 국가-자본의 권력관계를 규제완화와 지원의 존속으로 조정하고 1987년 이후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통해 순치함으로써 새로운 축적구조를 정립해 보려는 시도였지만, 이것은 자본의 무규율적 축적과 계급갈등의 격화를 조장하여 도리어 한국자본주의의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 1997년 IMF 위기의 배경을 제공했다. 또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IMF 관리체제하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新自由主義 전략은 재벌의 노동자 착취에 대한 규제완화(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노동자계급의 고통전담²³⁾을 통해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저임금, 저가격이 아니라, 고기술, 고품질이 국제경쟁력의 기본적 요소로 되고 있는 21세기 세계자본주의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반동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VI. 1997~98년 外換金融危機의 社會的 蓄積構造 이론적 해석: 新自由主義 책임론 비판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원인을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新自由主義에서 찾는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오늘 ‘새로운 통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통념’은 한국자본주의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

23) 앞서 확인했듯이 1990년대 이후 착취율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이병희(1997)에 따르면, 1987년 이후 노동규율의 강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인 임금프리미엄과 통제감독비중이 상승했다.

립과 붕괴 및 長期波動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보통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김영삼 정부 시대에 이루어진 금융자유화가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주된 원인이다. IMF 위기는 김영삼 정부가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지 않고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또 1997년 外換金融危機가 실물경제의 붕괴로 이어진 것은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강요한 구조조정 정책과 이에 굴종한 김대중 정부의 新自由主義 정책 때문이다.

초국적금융자본과 新自由主義가 위기를 촉발, 격화시켰다는 新自由主義 책임론의 주장은 사실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민간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도와 조정의 역할을 포기했는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과잉투자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김영삼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마저 포기함으로써 한국은 초국적금융자본의 외채 상환 요구와 통화화에 대한 공격에 매우 취약해졌다.

또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한국경제위기를 세계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해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작년 外換金融危機 직후 IMF가 유포했던 '족벌자본주의론'(crony capitalism) 혹은 '재벌책임론' 같은 한국경제위기 '내인론'의 일국적 관점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막대 구부리기' 역할을 했다. 나아가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초국적금융자본과 그 하수인인 IMF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폭로했다.

하지만 新自由主義 책임론 및 그들이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통제(예컨대 Tobin세 도입을 통한 투기적 단기자본이동 규제)와 같은 케인스주의 정책은 현재 위기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新自由主義 책임론의 지평을 넘어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붕괴 및 자본주의의 長期波動이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위기를 논의해야 한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한국자본주의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급격한 유입과 탈출), 및 동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의 '전염'이 현재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위기 이전 한국의 '기초경제여건'은 건전했기 때문에, 위기는 '기초경제여건'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승승장구하던 한국자본주의가 무너진 것은 김영삼 정부의 新自由主義 정책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김영삼 = 김대중 정부가 新自由主義를 맹종하지 않았더라면, 또 초국적금융자본과 IMF가 강요한 新自由主義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자본주의의 변형은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기 이전 한국자본주의의 '기초경제여건'은 결코 건전하지 않았다. 1997년 外換金融危機가 폭발하기 전 한국자본주의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의 한복판에 있었다. 1990년대 초 시작된 장기불황은 1960년대 이후 30년간의 장기호황을 지탱해 왔던 國家資本主義的 社會的 蓄積構造가 1980년대 말부터 붕괴하면서(이는 공통화한 재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의 약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초과착취체제의 균열 등으로 표출되었다)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폭발 이전 각종 利潤率 지표들이 저하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1997년 外換金融危機가, 新自由主義 책임론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한 금융공황이 아니라 現實資本 축적의 위기임을 말해 준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이 주목하는 금융자유화에 따른 초국적금융자본의 급격한 투기적 유입과 탈출은 폭발 직전의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²⁴⁾

그리고 1990년대 초 新自由主義로의 선회는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1980년대 말 國家資本主義的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장기불황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정책'은 이미 효능이 소진된 國家資本主義的인 社會的 蓄積構造를 新自由主義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였다. 사실 서구에서도 新自由主義는 1970년대 구조적 위기 이후 利潤率이 저하하는 제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한 결과 팽창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으로 대두했다.²⁵⁾

24) 이 부분에 한정해서는, 다음과 같은 新自由主義 책임론자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정부 규제와 감독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1970~80년대 정부가 금융시장을 통제했을 때 한국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규제가 완화된 1990년대 초부터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현재의 위기를 낳은 것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간섭을 받지 않고 차입과 대부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정부의 결정이었다"(Amsden and Euh 1997). "현재의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그 실패는 통상적인 견해와는 달리 과잉규제(overregulation)가 아니라 과소규제(underregulation)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 주요한 문제는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의 감독 실패이다"(Chang, 1997). "상용하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이 없이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을 개방한 것이 현재 동아시아의 위기를 초래했다"(Stiglitz, 1998). "이번 공황의 원인(은) 금융자유화와 그에 수반한 자본 유입이었다. ... 결국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및 금융공황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대거 유출입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움직임과 금융 및 자본자유화라는 금융제도의 전세계적 변화(즉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유철규, 1998, pp. 200~201).

25) 예컨대 Brenner(1998)를 보라.

또 서구에서 新自由主義로의 전환은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대응이 실패한 뒤에 이루어졌다. 물론 新自由主義적 금융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경기순환, 예컨대 실물경제적 연관이 미약한 나라들 사이에서 경기순환의 동조화, 주가지수의 동조화 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新自由主義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즉 위기의 산물이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IMF 위기의 원인을 한국자본주의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내재적 모순이 아니라 외부(초국적금융자본의 논리)에서,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의 新自由主義 정책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1960~80년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의 國家資本主義的 社會的 蓄積構造를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등으로 미화한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실제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형평의 관점에서 新自由主義的 자유시장경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하면서, 위기에 대한 처방을 동아시아 '發展國家' 모델의 부활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현재 위기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파산을 입증한 것이며, 동아시아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 공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한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영미식의 新自由主義 자유시장경제이든, '라인형'의 '사회적 시장경제'이든,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든), 공황은 숙명이라는 사실, 즉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新自由主義的 자유시장자본주의, 케인스주의적 개혁자본주의 같은 자본주의의 특정한 조직형태나 정책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며, 자본주의 일반에 내재한 모순의 필연적 폭발 및 일시적 해소형태라는 사실을 환기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초 이미 수명이 다한 것으로 판명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에 집착하는 新自由主義 책임론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조금도 진보적이지 않다.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그 전성기에조차 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에 기초한 모순에 가득 찬 체제였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이 주장하는 케인스주의적 자본통제 정책(예컨대 Tobin세의 도입)은 기껏해야 금융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을 뿐이며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적' 시절에 누적된 과잉자본과 노동력 가치의 대대적 파괴 없이는 지속적 경기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自由主義를 케인스주의로 대체함으로써 한국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을 극복,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통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적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社會的 蓄積

構造는 결국 '일국사회주의'나 '社會的 市場經濟'와 같은 일국개량주의의 재판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일국개량주의가 21세기 세계화와 新自由主義의 조건에서 더이상 자본축적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각종의 '社會的 市場經濟' 실험의 실패에서 입증되었다. IMF 위기는 '新自由主義 대 케인스주의'의 이분법의 구도를 넘어 자본주의의 축적논리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VII. 결 론

'社會的 蓄積構造'의 성립과 붕괴 혹은 利潤率의 長期波動的의 관점에 설 때 1997년 말 폭발한 外換金融危機의 뿌리는 1996년부터 본격화된 주기적 공황을 넘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에 소급된다. 즉 1997년 外換金融危機는 단지 '10년주기'의 과잉생산공황이 아니라 장기불황에 주기적 공황이 중첩되어 폭발한 것이다. 이른바 '10년주기 과잉생산공황론'은 순환적 공황과 구별되는 장기불황,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김성구(1999) 등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위기론'은 구조적 위기와 일반적 위기만을 주장하고 순환적 위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1997년 外換金融危機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해 온 國家資本主義的 社會的 蓄積構造가 1980년대 말 이후 붕괴하면서 초래되었다. 즉 국제정치관계(냉전체제), 국가-자본 관계(정부의 재벌육성과 통제체제), 자본-노동 관계(장시간저임금 초과착취 체제), 국가-시민 관계(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국제경제관계(한-미-일 삼각무역구조) 등의 요소로 성립한 1960~80년대의 社會的 蓄積構造는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한 기관차 역할을 했지만, 1980년대 말 이후 구소련 동유럽 체제의 몰락, 재벌의 성장, 6월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대미무역수지의 적자구조로의 전환 등을 계기로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의 형성이 지연되면서 구조적 위기, 장기불황이 현재화했다.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은 이미 '30년 장기호황' 기간 진행되고 있던 利潤率의

저하경향의 결과였으며, 그 저하경향을 다시 격화시켰다. '30년 장기호황' 과정을 통해 利潤率의 저하경향이 현재화되고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 利潤率의 저하는 임금상승에 기인한 이윤압박이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7년 外換金融危機 발발 직전 각종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1997년 外換金融危機가 단지 순수금융공황이 아니라 現實資本 축적의 위기였음을 보여준다. 新自由主義 책임론자들은 外換金融危機 직전까지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지표로 표현되는 기초경제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개선되기조차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수익성 지표의 급격한 악화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들(특히 외채)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利潤率의 저하로 집약되는 現實資本 축적의 위기가 1997년 말 外換金融危機의 형태로 폭발하게 된 배경은 진부화된 國家資本主義의 축적체제에 중첩된 김영삼 정부의 新自由主義의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특히 OECD 가입을 전후한 금융자유화가 外換金融危機를 직접 촉발시킨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도 기존의 國家資本主義의 축적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新自由主義의 규제완화 정책에서 장기불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이것은 위기의 폭발을 도리어 재촉했다. 김영삼 정부의 新自由主義 정책으로의 선회와 함께 한국자본주의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급격히 증대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대거 퇴각이 지난 外換金融危機를 촉발시켰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즉 세계적 금융 불안정성이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구조적 위기, 장기불황에 대해 外換金融危機라는 극적인 하강의 정세적 형태를 부여했던 것이다. 또 1997년 外換金融危機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1998~99년 대불황을 결과시켰던 것은 外換金融危機를 촉발시킨 원인인 김영삼 정부의 新自由主義 정책을 도리어 위기의 처방으로 더 강압적으로 밀고 나갔던 김대중 정권과 IMF의 新自由主義의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이를 기화로 한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수탈 때문이다.

1960년대 이래 장기호황을 지탱해 온 한국의 社會的 蓄積構造는 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붕괴했다.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와 함께 한국자본주의는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국면으로 반전되었으며, 1997년 外換金融

危機는 그 대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이미 종식되었다. 현재 한국자본주의는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체제의 주변부적 위치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체제 중심부로의 진입 전망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진부화된 국가주도적 발전전략을 新自由主義的 혹은 네오-아메리카적 자유시장경제로 대체함으로써 구조적 위기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는 1997년 外換金融危機에서 보듯이, 다른 발전도상국, 러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新自由主義的 자유시장의 승배는 21세기 한국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심화와 사회의 '야만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점에서 오늘 김대중 정부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파산한 新自由主義 정책을 폐기하기는커녕 IMF의 통제하에서 더 충실하게 추종하고 있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 參考文獻

1. 김성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9.
2. 김형기,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 구조전환의 10년," 『경제학연구』, 제 44 집 제 4 호, 1996, pp. 253~285.
3. 대한민국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 93~97』, 1993.
4. 박동철, "한국경제에서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발전방식의 형성과정,"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1993.
5. 백웅기, "한국경기순환의 특징과 양태: 역사적 고찰," 『한국개발연구』, 제 15 권 제 3 호, 1993, pp. 53~93.
6. 안병직(편), 『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1995, pp. 13~32.
7. 유철규, "금융공황과 IMF 금융개혁의 문제점," 『동향과 전망』, 1998 봄.
8. 이대근, "세계경제의 신조류와 한국의 진로," 안병직(편), 『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1995, pp. 13~32.
9. 이병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이병천·김균(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10. 이병희, "한국 제조 대기업에서 노동규율 메커니즘의 특징," 『동향과 전망』, 제 33 호, 1997, pp. 239~56.
11. 장하원, "한국 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이윤율 추세(1963~1990)," 조원희(편), 『한국경제의

-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1997.
12. 정병휴·양영식,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2.
 13. 정운영,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 소개와 평가," 『이론』, 제 13 호, 1995, pp. 36~63.
 14. 조원희(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1997.
 15. Albert, M., *Capitalism Vs. Capitalism: Four Walls Eight Windows*, 1993.
 16. Amsden, A. H., *Asia's Next Gian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7. ———, "The Specter of Anglo-Saxonization is Haunting South Korea," in Lee-Jay Cho and Y. Kim(eds.),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1994, pp. 87~125.
 18. ———, "Big Business-Focused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1995.
 19. ——— and Yoon-Dae Euh, "Behind Korea's Plunge,"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7, 1997.
 20. ——— and T. Hikino, "Borrowing Technology or Innovating: An Exploration of the Two Paths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R. Thompson(ed.), *Learning and Technological Change*, St. Martin's Press, 1993, pp. 243~266.
 21. Bowles, S., D. M. Gordon, and T. Weisskopf, "Power and Profits: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Postwar U.S. Econom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8, No. 1/2, 1986, pp. 132~167.
 22. ———, "Business Ascendancy and Economic Impasse: A Structural Retrospective on Conservative Economics, 1979~87,"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1, 1989, pp. 107~134.
 23. ———, *After the Waste Land*, M. E. Sharpe, 1990.
 24. Brenner, R., "Uneven Development and the Long Downtur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from Boom to Stagnation, 1950~1998," *New Left Review*, No. 229, May/June 1998.
 25. Chang, Ha-Joon, "A Crisis from Underregulation," *The Los Angeles Times*, December 31, 1997.
 26. ———, H. Park, and C. Yoo,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z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2, No. 6, 1998, pp. 701~715.
 27. Cho, Lee-Jay and Y. Kim, "A New Vision for Institutional Reforms," in Cho, Lee-Jay and Y. Kim(eds.),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1994.
 28. ———(eds.),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1994.
 29. Cumings, B.,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4.
 30. Devine, J. N., "Book Reviews: Understanding Capit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7, No. 4, 1985.

31. Gordon, D. M., "Up and Down the Long Roller Coaster," in URPE(ed.), *U. S. Capitalism in Crisis*, URPE, 1978.
32. ———, "Inside and Outside the Long Swing: The Endogeneity/Exogeneity Debate and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Approach," *Review*, Vol. 14. No. 2, 1991, pp. 263~312.
33. Hart-Landsberg, M., "Learning from South Korea," *Monthly Review*, September 1990, pp. 54~63.
34. ———, "The Asian Crisis: Causes and Consequences," *Against the Current*, No. 73, March/April 1998.
35. Johnson, C., "What is the Best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for Korea?" in Lee-Jae Cho and Y. Kim(eds.),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1994, pp. 63~85.
36. Kim, Linsu, "National System of Industrial Innovation: Dynamics of Capability Building in Korea," in R. Nelson(e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357~383.
37. Kleinknecht, A. et al. (eds.), *New Findings in Long-Wave Research*, St. Martin's Press, 1992.
38. Kotz, D. M., "Interpreting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Theory," in D. M. Kotz et al. (eds.),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50~71.
39. ——— et al. (eds.),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40. Krugman, P.,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November/December 1994, pp. 62~78.
41. Mandel, E., *Long Waves of Capitalist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42. ———, "The International Debate on Long Waves of Capitalist Development: An Intermediary Balance Sheet," in A. Kleinknecht et al. (eds.), *New Findings in Long-Wave Research*, St. Martin's Press, 1992, pp. 316~338.
43. Nelson, R. (e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44.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1944.
45. Shaikh, A., "The Falling Rate of Profit as the Cause of Long Wav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n A. Kleinknecht et al. (eds.), *New Findings in Long-Wave Research*, St. Martin's Press, 1992, pp. 174~202.
46. Stiglitz, J., "Sound Fi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http://www.worldbank.org/html/extdr/extme/jssp031298.htm>, 1998.
47. Thompson, R. (ed.), *Learning and Technological Change*, St. Martin's Press, 1993.
48. Trotsky, L., 『영구혁명 및 평가와 전망』, 신평론, 1989.
49. URPE(ed.), *U. S. Capitalism in Crisis*, URPE, 1978.
50. Wade, R., "From 'Miracle' to 'Cronyism': Explaining the Great Asian Slump,"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2, No. 6, 1998.

51. ——— and F. Veneroso,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ersu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New Left Review*, No. 228, March/April 1998.
52.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53. Young, A. , "Lessons from the East Asian NICs: A Contrarian 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8, No. 3/4, April 1994, pp. 964~973.